

영국의 EU 탈퇴 관련 논란의 배경과 향후 전망

김준엽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junyupkim@kiep.go.kr, Tel: 3460-1064)

차 례 ●●●

1. 영국의 EU 탈퇴(Brexit) 가능성 관련 논란
2. Brexit 논란의 정치·경제적 배경
3. Brexit 가시화 가능성과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국의 EU 탈퇴(Brexit) 관련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0년 집권 이후 EU의 통합 가속화 움직임에 줄곧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 최근 캐머런 총리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Brexit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공식 발표함.
 - Brexit 관련 국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까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경제계 수장들도 우려를 표함.
 -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Brexit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으나 최근 반대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음.
- ▶ Brexit 논란은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과 경제적 셈법의 차이에서 비롯됨.
 - 정치적으로 본 논란은 보수당 저변의 Euroscepticism이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된 데서 기인함.
 - 경제적 셈법과 관련하여 Brexit 찬성 측은 EU 분담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공동농업정책, 공동통상정책으로 인한 EU의 각종 규제에서 영국이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반면 Brexit 반대 측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EU 단일시장 접근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함.
 - 영국의 높은 대(對)EU 무역의존도, 취약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EU의 금융규제 양상을 감안해 보건데,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영국경제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 영국의 정치성향을 고려할 때 Brexit 및 관련 국민투표 모두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정당 지지도에서 노동당이 상당 기간 10% 안팎으로 보수당을 앞서왔고, 앞으로도 보수-자민 연립정부에 약제가 될 만한 사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2015년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점치기는 쉽지 않음.
 -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EU 개혁방안들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기존의 국민투표와 관련한 계획을 변경 또는 철회할 가능성이 큼.

1. 영국의 EU 탈퇴(Brexit)¹⁾ 가능성 관련 논란

■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국의 Brexit 관련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0년 집권 이후 EU의 통합 가속화 움직임에 줄곧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 Brexit 관련 사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
 - 최근 논란은 2012년 7월 1일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한 일간지에 리스본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당시 노동당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으면서 촉발됨.²⁾
 - 또한 2012년 12월 17일 캐머런 총리는 하원에서 영국의 EU 탈퇴도 “생각해 볼 수 있다(Imaginable)” 라고 밝힘에 따라 Brexit 논란을 가속화함.
-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연설을 통해 향후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와 관련한 일련의 정치적 일정을 제시한 상황임.
 -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포함한 일련의 EU 개혁방안에 대해 (다른 EU 회원국들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EU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함.
- Brexit 논란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임.
 - 노동당의 밀리밴드(Ed Miliband) 대표와 블레어(Tony Blair) 전 총리는 독일 *Spiegel*지 등 언론과의 대담에서 각각 EU의 개혁 필요성과 별도로 Brexit에 반대함을 분명히 하였고,³⁾ 국민투표 공언 역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대표이자 부총리인 클레그(Nick Clegg)는 (보수당과의 연정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Brexit 및 관련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며, 실제로 국민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탈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임을 시사함.

■ 영국 경제계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카(Sir Roger Carr) 영국산업연맹 회장, 브랜슨(Sir Richard Branson) 버진그룹 창업자, 깁슨-스미스(Chris Gibson-Smith) 런던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10명은 2013년 1월 9일 *Financial Times*지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경제계 수장들은 노동시장 규제, 서비스 부문의 단일시장 확대, EU 장기예산에서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EU 개혁방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한편, 이 협상이 EU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힘.

1) 'British' 와 'Exit' 을 합성한 말로서, 영국의 EU 탈퇴를 나타내는 신조어(新造語)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Grexit에 빗대어 'Brexit' 라고 사용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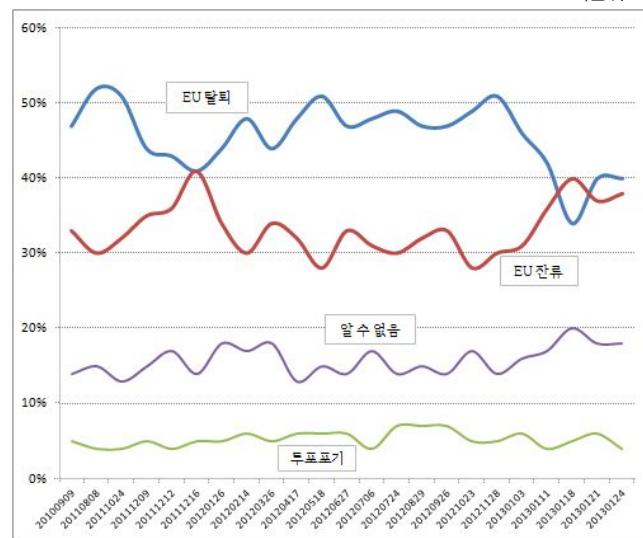
2) 캐머런 영국총리는 *The Sunday Telegraph* 기고를 통해, 영국이 2009년 12월 공식 발효된 리스본 조약 비준과정에서 국민투표(Referendum)를 거치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 "(EU와의 관계에서)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라고 밝힘.

3) David Miliband Interview(2013), "We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the EU," Spiegel Online, (Feb 7)

■ EU 탈퇴와 관련한 영국대중의 여론은 탈퇴 찬성 측이 더 높으나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임.

- 영국 여론조사기관 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월 26일부터 2013년 1월 11일 기간 중 EU 탈퇴(Leave EU)에 찬성하는 여론이 줄곧 높았으나 그 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그림 1 참고).
- 2011년 12월에 실시된 조사를 제외하고는 2012년 10월까지 줄곧 10% 이상 EU 탈퇴여론이 높았으나, 2013년 1월 11일 조사를 기점으로 찬반여론 격차가 줄어들어, 2013년 1월 18일 조사에서는 오히려 EU 잔류여론이 6% 가량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함.

그림 1. EU 탈퇴 관련 영국국민들의 여론조사 추이
(단위: %)



자료: YouGov.

2. Brexit 논란의 정치·경제적 배경

■ Brexit 논란은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에 대한 정치적인 관점 및 경제적인 선택 차이에서 발생함.

- EU 회원국 지위가 주는 경제적 이익/불이익에 대한 선택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논쟁은 경제적인 논거의 틀 내에서 이루어짐.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국 정치권 내 유럽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크게 적극적 Euroscepticism, 소극적 Euroscepticism, 그리고 친(親)유럽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음.⁴⁾
 - 적극적 Euroscepticism은 유럽통합의 움직임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국가별 고유 권한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EU에 위임할 수 있다는 소극적 Euroscepticism과 구분됨.
 - 친유럽주의는 Euroscepticism과 비교해서, EU 차원으로 위임될 수 있는 각 주권국의 고유 권한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EU 통합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함.⁵⁾

4) Euroscepticism은 일반적으로 '유럽혐오주의' 또는 '유럽회의주의'로 번역되는데, '혐오'와 '회의'가 지니는 의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에 따라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함.

- 영국 정치권의 Brexit 관련 입장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 유럽통합에 대한 관점에 따른 영국 정치권의 Brexit 관련 입장⁶⁾

구분	주요 주장	주요 세력
적극적 Euroscepticism	EU에서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임.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t Party)
소극적 Euroscepticism	최근의 EU 통합 가속화 움직임에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재협상(Renegotiation)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자주권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EU에 잔류할 수 있다고 주장함.	캐머런 총리, 보수당
친(親)유럽주의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것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자유민주당, 노동당

자료: 필자 작성.

- Brexit 논란의 이해를 위해 EU 탈퇴 찬반 측의 경제적 쟁점차이와 더불어 현재 여당인 보수당 저변의 Euroscepticism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Brexit 논란의 정치적 배경: 보수당의 Euroscepticism을 중심으로

- 보수당은 2005년 12월 캐머런이 당대표를 맡은 후 2010년 총선 승리를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영국국민의 Euroscepticism을 자극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실천해 왔음.⁷⁾

- 2009년 11월에 리스본 조약 비준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캐머런 당시 보수당 대표는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재협상을 통해 EU에 위임된 권한 일부를 되찾아올 것임을 공약함.
 - 보도자료 형태를 빌어 캐머런은 ① 위임된 기본권 현장에 대한 ‘선택적 유보(opt-out)’를 명확하게 보장받고, ②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권한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제하에 있지 않도록 할 것이며, ③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고용 관련 정책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법권을 EU의 지침이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협상하겠다고 공언함.
 - 이러한 차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당시 캐머런은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는 극단적 Euroscepticism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임.
- 캐머런은 2009년 6월 유럽의회 내 최대 정치그룹 중 하나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인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에서 탈퇴하여 ‘유럽 보수주의자 및 개혁주의자 그룹(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Group)’을 결성함.⁸⁾

5) 각 관점이 유럽통합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상대적인 것이며, 사안별 그리고 정당별로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6)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의 1/3가량은 적극적 Euroscepticism의 시각을 지님.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을 친유럽주의로 분류한 것은 본 정당들이 초국가적 형태의 EU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정치연합과 완전한 단일자유시장’으로서 EU를 형성해 나가는 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임.
 7) 본 부분은 김상수(2010), 「영국 보수당의 유럽혐오주의 -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을 중심으로」, 『EU 연구』 제26호를 참고함.
 8)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각국 정당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다시 이념 및 정치성향 또는 사안별로 일련의 정치그룹(Political Group)을 형성하여, 각 정치그룹 대표와 유럽의회 의장이 함께 중요 주제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논의는 담당 위원회에서 하는 구조임.

- ECR은 그들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하 선언(The Prague Declaration)’을 통해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전경쟁시장으로서의 EU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개인 및 개별 국가의 자유,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등 EU가 연방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것에 반대함.⁹⁾

■ 캐머런 총리는 WEF 연설에서 소극적 Euroscepticism을 취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적극적 Euroscepticism의 목소리 역시 일정 부분 절충하는 태도를 보임.

- 캐머런 총리는 본 연설에서 현재 유럽이 당면한 위기를 ① 유럽 재정위기로 드러난 단일통화시스템의 취약성, ② 세계경제에서 EU의 경쟁력 및 위상 쇠퇴, ③ 유럽통합 및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성으로 규정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완전한 수준의 단일시장으로 거듭나야 하며, 획일적인 통합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보다는 각 회원국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함.
- 캐머런 총리의 주장은 과거 노동당 정부의 그것과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보기 힘들다, 그 정도가 더 강하고 Brixit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언급했다는 점을 중요한 차이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입장변화에 대해 향후 EU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와 영국 내 보수당의 입지, 그리고 보수당 내 캐머런 총리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공존함.

2) Brixit 논란의 경제적 배경

■ Brixit 찬성 측은 EU에 매년 지급하는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고, EU의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바, 탈퇴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함.

- 연간 약 80억 파운드에 달하는 EU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EU 공동농업정책(CAP: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른 지원금 제공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함.
- EU 예산 분담금은 각 회원국의 인구대비 비율로 책정되는데, 영국의 2012년 순부담금(net contribution)¹⁰⁾은 약 69억 파운드임.
- 2007~13년 중 CAP에 의해 영국이 수혜받은 금액은 약 280억 파운드로 분담금인 약 354억 파운드보다 74억 파운드가량 적은 상황임.¹¹⁾

표 2. 회계연도 기준 영국의 對 EU예산 순부담금 추이

(단위: 십억 파운드)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순부담금	8.9	7.4	7.0	8.3	9.4	8.9	8.3

주: 2011/12년도 수치는 추정치이며 그 이후는 계획치임.
자료: 영국 재무부 (HM Treasury).

9)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 Group," <http://ecrgroup.eu>.

10) 전체 부담금에서 EU로부터의 공공부문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임.

11) 수혜금액 325억 유로, 분담금액 411억 유로를 영국 파운드로 각각 환산한 금액임.

- 주당 평균 노동시간 48시간 초과금지 같은 EU의 노동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시장 개방의무에서 벗어남으로써 대규모 이민자 유입 등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영국정부는 최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 회원국 내 노동력 이동제한 규정¹²⁾이 해제되는 2014년에 대규모의 노동력이 유입될 것을 우려하여 영국 거주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광고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EU가 금융거래세 등을 통한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본 규제의 영향에서 일정수준 벗어날 수 있다면 금융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Brexit로 영국이 EU의 공동통상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 규제 밖에 놓이면, 신흥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 내 무역 자유화가 상품무역에 집중되어 있고, 영국의 주력 산업인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는 여전히 회원국 간 장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Brexit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주장함.

■ Brexit 반대 측은 EU 분담금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EU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각종 통상협정 등을 다시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함.
- EU가 지니는 무역교섭 관련 협상력은 영국이 지니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됨.
- EU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나 공공조달시장 개방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회원국 소속 기업들에 유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협상력을 보임.
- 양자무역협상뿐만 아니라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같은 WTO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도 EU 내 영국이 포함됨으로써 영국의 국익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시킨다고 평가됨.
-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을 EU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인 외국기업들의 신규투자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됨.
- EU가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이 그러한 '확대된 EU'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함.¹³⁾
-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금융규제는 영국의 금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EU 회원국 지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Brexit 논란 자체가 줄 수 있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영국경제에 부정적인 상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Brexit 논란의 쟁점은 결국 EU 회원국 지위가 영국의 대외무역과 FDI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예상할지에 달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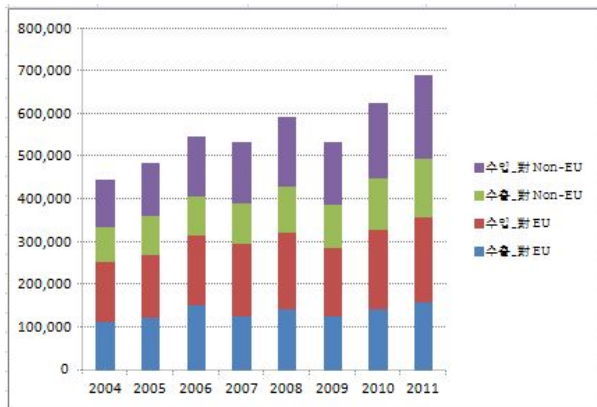
12) EU는 2004년 신흥회원국 노동력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7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2007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4년 1월 1일부로 본 거주이전 제한규정이 만료됨.

13) 2013년 2월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이며, EU 가입협상이 종료된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 1일부로 28번째 공식회원국이 될 예정임. 그 밖에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터키 등이 회원국 후보(Candidate Country)로 올라와 있으며,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이 잠재 후보국(Potential Candidate)으로 고려됨.

- 영국의 대외무역 비중규모를 EU와 비EU로 나누어 보면 절반 이상이 EU 회원국들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2004~11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역규모는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함(그림 2 참고).
 - 2006년 이후 총 무역 중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는 바,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사료됨(그림 3 참고).
 - 2004년부터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영국의 수출 및 수입대상 상위 10개국 중 유럽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뿐이며,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노르웨이만이 非 EU 회원국임(표 3 참고).

그림 2. 영국의 대EU 및 비EU 대외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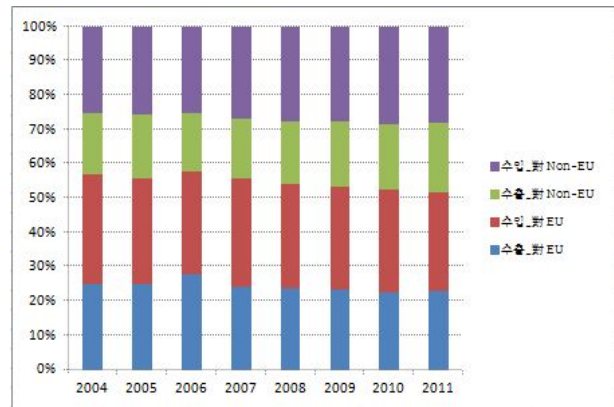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영국무역통계(HM Revenue&Customs, Overseas Trade Statistics).

그림 3. 영국의 대EU 및 비EU 대외무역 비중

(단위: %)



자료: 영국무역통계(HM Revenue&Customs, Overseas Trade Statistics).

표 3. 영국의 상위 10개 주요무역국

(단위: 백만 파운드)

	상대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미국	28,682	31,153	32,158	32,239	34,964	33,570	37,413	38,949
	독일	21,540	22,897	27,147	24,478	28,454	24,829	28,539	33,038
	프랑스	18,452	19,822	29,012	17,935	18,746	18,018	20,262	23,056
	네덜란드	11,957	12,646	16,622	14,966	19,367	17,613	20,537	22,671
	아일랜드	14,049	16,205	17,202	17,632	18,586	15,484	16,375	17,219
	벨기에	10,190	11,120	13,091	11,741	13,099	10,533	12,946	15,354
	이탈리아	8,351	8,743	9,465	9,102	9,309	8,229	8,798	9,888
	스페인	9,044	10,617	12,461	9,888	10,037	8,985	9,700	9,449
	중국	2,378	2,824	3,279	3,781	4,870	5,129	7,225	8,773
	스웨덴	4,329	4,562	5,169	4,863	5,095	4,106	5,408	6,141
수입	독일	35,606	37,507	40,004	44,197	44,460	39,628	45,617	49,025
	미국	22,975	22,993	26,367	26,365	28,877	28,422	31,352	30,296
	중국	10,628	13,194	15,559	18,794	21,968	22,871	28,228	30,156
	네덜란드	18,010	19,102	20,673	22,785	25,327	21,561	26,215	28,072
	노르웨이	8806	12,444	14,791	14,595	20,646	15,085	19,459	24,245
	프랑스	19,794	20,149	21,295	21,666	23,191	20,502	21,780	23,089
	벨기에	12,719	13,306	14,274	14,825	16,103	14,894	17,025	18,681
	이탈리아	12,055	11,935	12,549	13,188	14,061	12,100	14,001	14,106
	아일랜드	10,108	10,005	10,417	11,249	12,020	12,264	12,735	12,952
	스페인	8,780	9,641	10,442	10,112	10,291	9,124	9,967	10,753

자료: 영국무역통계(HM Revenue&Customs, Overseas Trade Statistics).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에 따르면, 영국이 EU 밖에서 (EU 와) 양자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2020년까지 유럽 주요국과의 무역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표 4. 2020년까지의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영국과 주요국의 무역규모 변동 비율

(단위: %)

상대국	수출	수입	상대국	수출	수입
독일	-9.6	-15.0	기타 EU 27개국	-28.4	8.4
프랑스	-19.1	-2.4	기타 유럽 국가	7.5	4.3
이탈리아	-24.7	3.3	NAFTA	8.4	9.1
베네룩스 3국	23.8	-12.4	기타 OECD 국가	7.1	17.5
스페인	-17.5	-3.3	기타 세계	7.7	7.1
폴란드	-23.2	-5.7	EU 전체	-10.9	-5.0
스웨덴	-0.9	-15.3			

주: 1) 베네룩스3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의미함.

2) EU 단일시장에서 영국이 제외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현재 수준으로 EU 시장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함. 또한 나머지 EU 회원국들 간의 모든 무역장벽은 철폐된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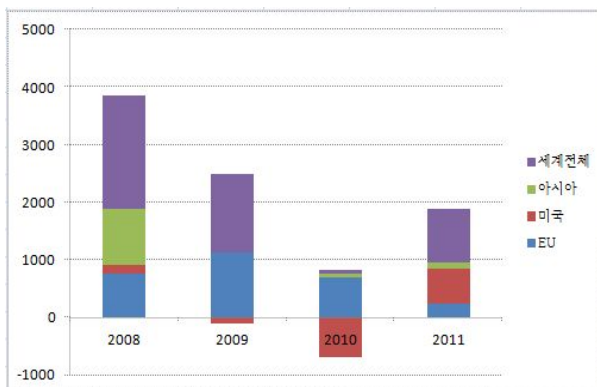
자료: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UK and the EU of completing the Single Market," BIS Economics Paper No.11, Feb 2011.

- Brexit 이후 영국에 대한 FDI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제조업과 관련하여 영국이 FDI 순유입국임을 고려할 때 Brexit가 영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 동안(2008~11년)의 수송장비 부문 FDI 자료에 따르면, EU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규모가 영국이 EU에 투자하는 규모를 초과함(그림 4 참고).
- 금속 및 기계류에 대한 FDI 역시 미국의 투자가 영국의 미국 투자금액을 큰 규모로 상회하는데, 이는 영국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음을 의미함(그림 5 참고).
-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가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Brexit는 영국 제조업에 투자 전환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4. 영국의 FDI: 수송장비 부문(순유입액)

(단위: 백만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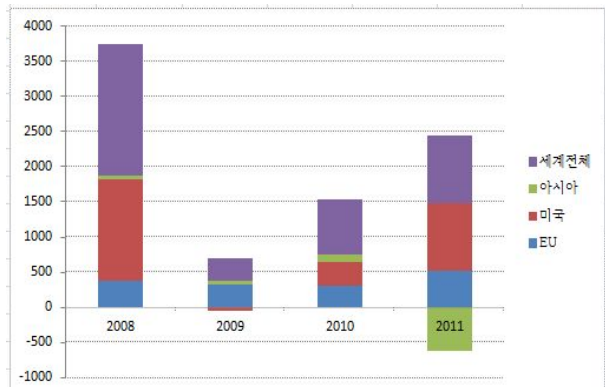


주: 영국에 대한 FDI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뺀 순유입액을 의미함.

자료: 영국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그림 5. 영국의 FDI: 금속 및 기계류 부문(순유입액)

(단위: 백만 파운드)



주: 영국에 대한 FDI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뺀 순유입액을 의미함.

자료: 영국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EU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더라도, 영국이 EU를 탈퇴하였을 때 금융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EU 11개 회원국은 2013년 2월 14일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ding Tax)를 이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함.¹⁴⁾
 -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11개국¹⁵⁾이 이 방안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시함.
- EU는 금융시장 위축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강화의 방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금융산업은 자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바, 회원국 지위 유지가 협상을 통한 규제 관련 절충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도 유리할 수 있음(표 5 참고).

표 5. EU 내 영국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율	23.7	23.6	24.6	24.7	23.9	23.3	23.2

주: 보험산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EU 내의 금융산업 관련 명목 부가가치 중 영국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EU 통계청 (Eurostat).

3. Brexit 가시화 가능성과 향후 전망

- Brexit 가시화와 관련하여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보면, 현재로서는 (보수당의) 2015년 재집권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부터 노동당 지지율이 상당 기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나타냄(그림 6 및 그림 7 참고).
 - 조사시점 및 표본에 따라 조사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2년 4월 이후 노동당이 줄곧 10% 내외로 지지율이 앞서는 모습을 보임.
 - 캐머런 총리의 WEF 연설 직후 양 당의 지지율 격차가 6%까지 줄어드는 조사결과도 발표되었으나¹⁶⁾ 2월 들어 격차가 다시 10% 안팎으로 확대됨.
 - 현재로서는 보수-자민 연립정부에 악재가 될 만한 국내적 요인이 산재한 상황임.
 - 2012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함으로써 2012년 3/4분기를 제외하고 2011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IMF는 2013년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 2011년도 4/4분기: -0.3%, 2012년도 1/4분기: -0.2%, 2012년도 2/4분기: -0.4%, 2012년도 3/4분기: 0.9%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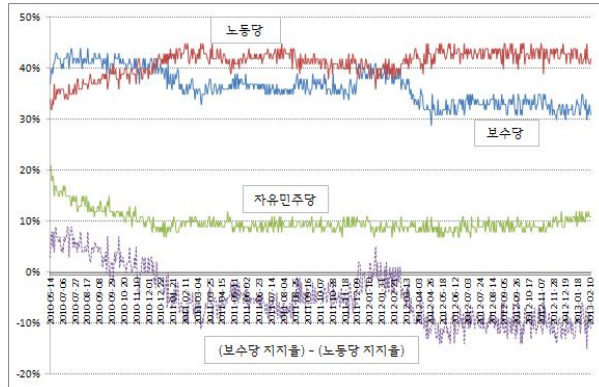
14) 민간 금융기관들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세율을 각각 0.1%(주식, 채권) 와 최저 0.01%(파생상품)씩 부과한다는 방안으로, 금융거래기관 중 한 곳이라도 FTT 참여국에 속하거나 FTT 참여국에서 발행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경우 과세대상이 됨.

15)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16) YouGov/Sunday Times, Jan 25th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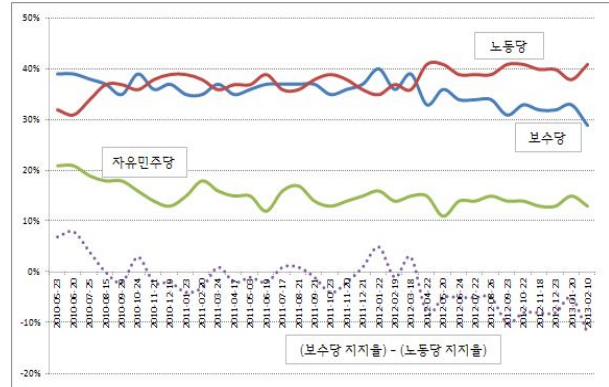
17) OECD 자료(전분기대비, 계절조정) .

그림 6. 영국 주요 정당의 지지율 추이(YouGov)
(단위: %)



자료: YouGov/Sun, YouGov/Sunday Times.

그림 7. 영국 주요 정당의 지지율 추이(ICM)
(단위: %)



자료: ICM/Guardian.

- 2013년 1월까지 영국 대형 음반유통회사인 HMV, DVD 및 비디오 대여 프랜차이즈인 블록버스터 영국법인을 비롯한 여러 유통업체들이 파산하였고, 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민간 경제수장들이 2013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¹⁸⁾
- 영국정부는 경제둔화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임에도 2010년부터 지속해온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 영국 재무부는 2012년 12월 균형재정 목표시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시키는 등 긴축목표를 완화시키기는 하였으나 부총리와 재무장관이 잇따라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기존의 정책방향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함.
- 긴축정책의 여파로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혜택 범위가 축소되거나 앞으로 제한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반발여론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보수당이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캐머런 총리는 WEF에서의 연설 말미에 자신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야 함을 믿는다고 밝힘으로써¹⁹⁾ 영국의 EU 탈퇴를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일단 EU를 탈퇴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U 탈퇴 찬성 여론이 높은 현재의 상황을 단시일 내의 국민투표를 통해 표출시킬 의사가 없음을 나타냄.
- EU 회원국들이 영국이 제시한 개혁방안에 모두 동의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음.
- 캐머런 총리의 WEF 연설에 즉각 반발한 EU 집행부 및 독일,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의 경우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EU 내의 자유시장 확대 같은 개혁노력을 함께할 의사를 밝힘.
- 캐머런 총리의 EU 개혁방안이 재정통합, 은행동맹 등의 기존 EU 통합방안들과 절충되는 과정에서 보수당 내의 EU 탈퇴 여론을 설득할 정치적 명분이 생긴다면, 2017년 내 국민투표 실시라는 기존의 스케줄을 철회할 여지가 생김.

18) Most captains of industry foresee extended stagnation, The Financial Times, Jan 3rd 2013.

19) "And just as I believe that Britain should want to remain in the EU so the EU should want us to stay."

- 영국의 캐머런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여 EU 장기예산안 삭감을 관철시킨 것이 그러한 정치적 명분의 한 예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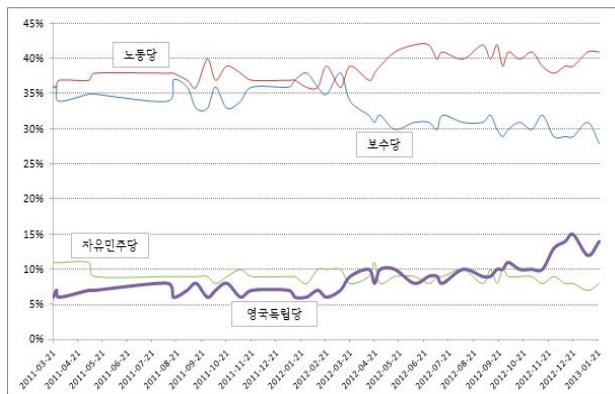
※ EU 정상들은 지난 2월 7일과 8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장기 EU 예산안(2014~20)을 전기(2007~13) 9,940억 유로 대비 3.4% 줄어든 9,600억 유로에 합의함.

■ 영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 역시 Brexit 관련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주된 요인임.

- 영국의 정당들은 EU와 영국이 완전하게 통합되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국민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EU와의 관계설정 문제를 국내정치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왔음.
- 다만, 보수당과 같은 주요 정당에서 EU 탈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Bixit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경여론을 보수당 지지로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료됨.
- 영국의 무조건적 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 지지율이 평균 10% 안팎임을 감안하면(그림 8 참고), 보수당의 움직임은 Brexit 강경 지지여론 흡수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EU 탈퇴 여론추이와는 별개로 대EU 관계는 영국 국민이 생각하는 당면과제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2013년 1월 Ipsos MORI Issues Index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은 경제와 실업문제를 각각 52%와 29%의 비율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생각하는 반면, 유럽 및 EU와 관련한 사항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2012년 연평균 조사치인 6%와 같은 수준임(그림 9 참고).
- 기존에 실시된 동일 조사에서 EU 및 유럽에 대한 관심도가 2005년 6월 이후 한 차례도 10%를 넘지 않았다는 점은 EU 탈퇴 관련 이슈가 총선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실제로 보수당 지지율과 EU 탈퇴 찬성 여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함(그림 10 참고).

그림 8. 영국독립당(UKIP)의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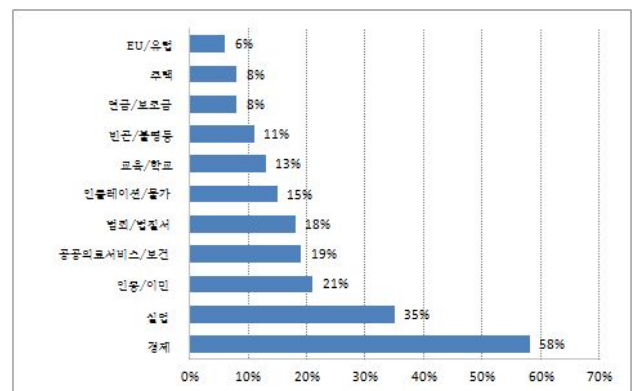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pinium Research L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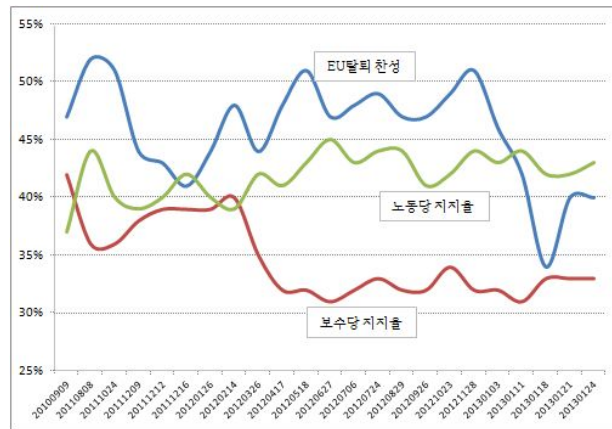
그림 9. 2012년 영국의 당면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단위: %)



자료: Ipsos MORI Index.

그림 10. 주요 정당의 지지율 및 EU 탈퇴 찬성여론 추이
(단위: %)



자료: YouGov/Sun.

- 2015년 총선 결과에 따라 보수당이 UKIP과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도 낮아 보임. KIEP